

트럼프, 대서양 무역전쟁 발발 ‘초읽기’

美 단계적 추가관세 위협에
EU, 맞불관세 자동발효 장전

22일께 긴급정상회의서
'무역 바주카포' 초강수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으로 촉발된 미국·유럽 간 갈등이 대서양 무역전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방위에 맞서 유럽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들 준비하면서 당장 2월부터 양측이 통상재제를 치고받는 악순환에 들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가 검토 중인 맞대응 수단은 크게 두 갈래로 전해졌다.

하나는 지난해 미국·EU 무역 협상 과정에서 마련했다가 보류한 930억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다.

한 EU 외교관은 미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류 중이던 보복 관세가 2월 6일 자로 자동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작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협상 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정책에 항의하는 그린란드 주민들.

결로 시행을 접은 바 있다.

다른 하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의 발동이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금이야말로 이
무기를 사용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EU 대사들이 보복 조치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지난해 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유럽의 대응 방향은 정상급 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오는 22일께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복 관세든, ACI 발동이든 유럽이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수십 년만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란 반정부 시위로 1만8000명 사망

이란당국 “미국·이스라엘 책임…선동자 가려 처벌할 것”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약 1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주말판 선데이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1만6500~1만8000명이 사망하고 33만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란 시위가 확산한 뒤 다양한 기관에서 피해 상황을 추산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만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은 어렵다.

다만 시위대의 전언이나 동영상·사진 등에 비춰 피해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해외 언론과 인권단체는 의심하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번 시위로 전날 기준 33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와 별개로 4382건을 검토 중이다.

체포 건수는 2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봤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등 당국은 시위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부각하며 그 책임을 미국 등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해외 무장 단체들이

시위대를 선동해 소요가 커졌고 결국 희생자도 늘었다는 것이다.

이란 사법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아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적은 없다며 외국 세력 연계 여부를 쟁점까지 최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대 중 일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계된 용병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시위는 상당 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다.

이란 당국도 학교 재개, 인터넷 복구 방침 등 소식을 전하며 혼란이 수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 현지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국내 인터넷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곧 다시 개통될 예정이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확산하자 지난 8일 오후 국제전화와 인터넷 연결을 전면 차단했다. 일주일간 휴교령이 내려졌던 학교도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 당국자는 “최종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지난달 화폐가치 폭락 등 경제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수 주일째 규모를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우려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군사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